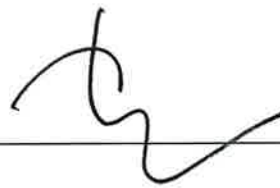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5. 4. 9.(수) 14:00~15:25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위 원 장



간 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 회의록

2025. 4. 9.

사법정책자문위원회

I. 개요

- 일시: 2025. 4. 9.(수) 14:00~15:25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권오곤(위원장)
 - 김영화, 김정욱, 이경춘, 전원열, 조현욱, 차병직(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형근(간사), 이문렬(서기)
- 배석자
 - 이지영(주무위원), 이필복(실무지원단원), 임서경(사법정책심의담당실 서기관)
 - 황인성(실무지원단장), 고원혁(실무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제9차 회의 회의록 확정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을 확정하였음

2.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

가. 기초발제

- 이지영 주무위원, 검토의 필요성,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인 사법지원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등 제안, 사법부의 물리적 시설접근 보장체계 구축, 사법접근센터의 사법 접근·사법지원 총괄센터로의 기능 전환, 공소장 등 장애정보 표기 방안, 피고인(피



의자) 진술조력 방안, 전문위원 제2연구반 논의결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조현욱 위원, 차병직 위원, 이경춘 위원, 김영화 위원, 전원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조현욱 위원

-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함. 구체적 실천을 위한 예규 제정 등이 필요할 텐데 과도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노력의무 정도를 명시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사법지원책임관과 관련하여서는 총무과장이 겸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 생각함
- 공소장에 장애정보를 표기하면 재판 과정에서 조력 필요 여부를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차병직 위원

-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구체적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사법지원예규안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함
-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며 제도 실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확보하는 데 위원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 이경춘 위원

- 기초발제를 들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음
- 역대 대법원장님 재임 시절마다 중점은 달랐지만 장애인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은 계속됐던 것으로 기억함. 오늘 안건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 시설 문제는 예산이 반영되면 즉각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절차적인 지원체계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음.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차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됨

○ 김영화 위원

- ‘모두를 위한 사법’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법접근성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에 찬성함.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임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장애인까지 확장해서 ‘모두를 위한 사법’이라는 가치에 좀 더 부합하게 내용이 채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음
- 현재는 법원 시설에 특화된 기준이 없어서 법원마다 시설이 제각각이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지원예규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고,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법부가 누구든지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의 모습처럼, 앞으로도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이 끝어나가면 다른 국가기관에도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전원열 위원

-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을 제고할 여러 가지 방안들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함. 회의자료를 보니 연구반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는 느낌을 받았음
- 외국인이 당사자인 재판을 하는 경우 언어가 안 통해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음. 외국인들이 실제 재판절차 중에 자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우려는 장애인보다 훨씬 더 높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의자료 116면에서 잠깐 언급되는 데 그친 것 같음
- 사법지원예규(외국인 불포함)와 사법접근센터예규(외국인 포함)의 대상이 다른 것과 관련하여 양자 간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 통역 쪽을 좀 더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좋겠음
- 마지막으로 결국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사법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더 고심해보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위원장, 김정욱 위원, 이경춘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사법접근센터’라는 명칭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음. 명칭이라든지 시각적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음
- 회의자료 62면 사법지원예규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은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예규 위반은 처벌조항도 없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가 적절해 보이는데, 중성적 언어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장애인의 경우 영상재판을 이용하게 되면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이지영 주무위원

- 회의자료 중 별지 8면 사법지원예규안은 장애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제안한 예규안이며,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은 ‘구축하여야 한다.’,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유관부서들과 검토한 결과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할 염려가 있고, 현재 단계에서는 이를 명시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하여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대체하였음
- 영상재판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사법부 또한 많은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일례로 발달장애인은 법정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집 근처의 복지관과 같은 장소에 영상재판 시설을 설치하고, 증인 지원관이 직접 출장을 가서 지원하는 협업 체계도 작년에 구축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해서 영상재판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법접근센터’ 명칭은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라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음. 사법 접근성을 의미하는 ‘Access to justice’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여 온 용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김정욱 위원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나 보호는 당연히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



만 그 방식에 있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음

- 공공의 영역에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서비스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같음. 그러다보니 일반 시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기조로 가다 보니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됨
- 회의자료 21면 이하에서 장애인의 사건참여비율 예측과 실제 신청의 간극이 크다고 나와 있는데, 회의자료 22면에 설명되었듯이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위축을 고려하면 사실 소송참여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한 참여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사법접근센터와 같이 좋은 취지로 공적자금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실제로 수요가 적어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보편적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음. 범위를 확장하다보니 서비스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실제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점점 이용률이 감소되는 것이 현실임
- 회의자료 86면에서 사법접근센터의 사법지원관을 사법지원책임관으로 승격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법지원관을 충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 하에서 이렇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진술조력인 부분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음. 과거 법무부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할 때 연간 2만 건 지원을 예상하면서 변호인 1인당 50만 원의 단가를 책정하여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음. 주민소득 대비 125%까지 신청할 수 있고, 70세 이상이면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2만 건을 추산한 것이었음. 변호인 1인당 적정 단가는 100~200만 원이므로 연간 5천 건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으나 결국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 사법접근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면 기본적으로



로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수요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실질적으로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위원장

- 실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상황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는지?

○ 김정욱 위원

- 건당 금액은 55만 원으로 과거보다는 향상되었지만 접견 및 다수의 재판기일 참석을 생각하면 변호인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며, 그로 인해 접견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무죄 사건의 경우 소명의식이 있는 극소수가 아니면 대부분 기피하는 분위기임.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임

○ 이지영 주무위원

- 김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형사공공변호인제도와 관련하여 공판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어도 장애인인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염려가 적음.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도입이 된다면 형사공공변호인제도와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판단계에서의 진술조력제도를 개선안으로 마련하였음
- 장애인의 경우 필수적 국선변호 등 소송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원 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선진국과 같이 장애인이 직접 사법절차에 참여하고 싶을 때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갖추려는 것이 목적임. 특히 선택의정서에 가입된 이상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수요에 대한 가성비를 따진 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함. 장애인이 차별 없이 법원의 시선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음
- 또한 사법접근센터에 책임관을 두거나 지원관을 두는 것이 인력 확충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님. 종래에 접근센터가 설치된 9개 법원은 기존의 사무관을 책임관으로 지정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법원은 총무과장, 종합민원과장 등 민원업무에 익숙한 분들을 책임관으로 지정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임. 가용자원을 인력 확충에만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김정욱 위원

- 사법지원 대상 확대 논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외에도 노약자나 임산부, 일시적인 상해·질병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위가 만연히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음. 또한 대상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는지 여부라든가 외국인이 반드시 사회적 약자는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경춘 위원

- 김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의미가 있지만, 사법부 입장에서 장애인 또는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함. 이번 안건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 문제와는 다른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사법접근권의 보완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함
- 용어가 전부 ‘사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 내 사법지원실을 포함하여 여타 다른 업무영역과 눈에 띄는 구별이 되지 않아 고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법원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



고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여, 사법지원제도를 좀더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개선방안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의 원칙, 내용, 절차, 인력, 교육 등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사법지원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집행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정보를 쉽게 습득하여 그에 기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조력을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제11차 회의 안건 설명

■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 이지영 주무위원, 논의의 필요성, 주요 쟁점,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 조현욱 위원
 - 외부적 공격과 관련한 실제 법관들의 사례를 조사한 후 회의가 진행되면 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음
- 이지영 주무위원
 -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하였기 때문에 논의에 도움이 될 것임

4.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10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결정함



5.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10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	공개
2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	공개
3	안건 설명자료(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공개

III. 다음 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

- 일시: 2025. 5. 14.(수) 14:3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끝).